

# 알맹이 빠진 지자체 통합 기준안

## 행정개편추진위 “인구·면적 과소한 지역” 등 선연적 수준 그쳐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 존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괄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통합기준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1차적 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 해당 지자체 주민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하다고 느끼거나 ▲ 인구 또는 면적이 전국 시·군별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 ▲ 인구가 최근 10년

간 상당히 감소하는 경우 ▲ ▲자치구의 경우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시·광역시·자치구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이다.

2차적 기준은 1차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 ▲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 통합을 통해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1차적 기준의 판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2차적 기준의 판단은 개편위원회가 하게 된다.

통합을 원하는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군·구 의회, 주민투표

권자 50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아 12월 말까지 개편위원회로 통합을 건의하면 된다.

개편위원회는 이 건의를 바탕으로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에 담아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2013년께 주민투표 등을 통해 최종 주민의사를 확인, 2014년 7월에 통합 지자체가 출범한다.

하지만, 애초 개혁위원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인구나 면적 규모에 따른 전국 지자체 통합안과 달리 인구나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지 않고 ‘상당히’라는 표현을 제시한 데 그쳐 실질적인 지자체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현욱 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자율통합이 대원칙인데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게 되면 정부가 방향을 지정해 끌고 가는 식이 된다”며 “위원회는 큰 틀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의가 있는 지역은 건의할 수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전에 행안부가 추진한 자율통합에 비해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재정건전성·일자리 창출 역점

## 정부 세법개정안 확정

기획재정부가 7일 내놓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부자감세’로 비판받던 법인세·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 철폐다.

감세는 시장과 자율을 증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상징적 정책이었으나 정치권의 끊임없는 요구에 3년 만에 정부가 무릎을 꿇은 것. 글로벌 재정위기와 복지 수요 증가로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고집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해 세율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22%에서 20%로 낮추며 최고구간 세율은 20%로 내리지 않고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당정은 중간세율 범위를 합의하지 못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억~100억원 이하로 설정해 중소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정부는 중견기업까지 해당되도록 2억~500억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세법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세율 10%, 2억~

유지해도 세액 공제를 전혀 못받았지만 올해는 기본으로 투자액의 4%(수도권의 대기업은 3%) 공제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임무 페지로 세액 공제 혜택이 줄어들던 대기업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양보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면제하고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대 사회보험료를 세액에서 빼주는 방안 등도 중소기업에 배려한 세제다. 이밖에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한 것도 취약계층 중산의 고용유인형 세제를 구축하는 차원이다.

## 근로장려세제 확대·중기 취업 청년 세 면제

## ‘부자감세’ 3년만에 철폐 공방 불씨 일듯

역설적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 기존 정책의 철폐가 부각된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해 좌절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의 재추진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보완, 근로장려세제 확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굵직한 제도의 변화도 적지 않다.

따라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재정건전성과 일자리 창출, 공생발전 등에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악화해 ‘부자감세’ 3년만에 철폐=정부는 애초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7일 고위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감세 철폐안을 추가했다.

법인세는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

500억원은 20%, 500억원 초과는 22%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분은 내년부터 35%에서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당정 협의에 따라 35%를 유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세제로 지원한다=정부는 올해도 세법개정안의 첫 쪽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투)를 담아 ‘고용유인형 세제’로 전환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고투에 기본공제를 신설하고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교 졸업생에 대한 공제 한도를 늘리는 등의 보완을 거쳤다.

정부가 지난해 뱀던 고투는 기업이 고용을 전년과 같은 수준을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공생발전’ 앞세워=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열을 늦춘 것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공생발전’ 화두를 담기 위해서다. 제목도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011년 세법개정안으로 달았다.

공생발전의 대표적 사례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다. 재벌 총수 일가의 몰락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이밖에 영단의 관법적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도 공생발전 화두가 반영됐다.

이밖에 영단이 공개되는 고액채납자의 범위를 늘리고 유사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담았다.

/\*연합뉴스

## “농업기반시설

## 北에 지원하자”

## 홍준표 교섭단체 연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북한에 관개시설, 농기계 등 농업 기반시설 지원을 제안했다.

홍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퍼주기식 식탁을 지원원조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북한의 농업생산력 회복을 통해 식량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대북 지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의 대북정책도 상호주의 원칙은 유지하되 좀 더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환적인 대북 접근도 강조했다.

이날 홍 대표는 북측에 ▲저수지, 관개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확충 지원 ▲참깨·녹두 등 고소득 작목 재배사업 지원 ▲축산 과수 특용작물 계약 재배 등을 제안했다.

그는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원하는 2~3개 지역에서 관개개발사업과 간척개발사업, 토지정리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자”며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와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또 개성공단 확대를 통한 개성-과주 일대 ‘통일경제특구’ 설치도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박노현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시교육청으로 출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 檢, 박노현 교육감 영장 청구

## 대기성 확인... 영장 불가피 과, 혐의부인... 법원판단 주목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환 부장검사)는 박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 오후 과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과 교육감이 같은 진보진영 후보인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로 돈과 직(職)을 건넸다는 혐의를 확인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과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박 교수가 사퇴하는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지난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에 건넸던 데 이어 6월 박 교수에게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자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면합의 당사자를 비롯한 각종 인사들에 대한 조사에서 과 교육감이 전달한 2억원에 대기성이 있다는 진술도 상당수 확보했다.

검찰은 과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과 교육감이 검찰 조사에서 핵심적인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재계 “감세 철폐 외국인 불신” 반발

## 중기업계 “공생발전 의지 확인” 환영

정부가 감세철폐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과세 철폐를 요청했다. 전경련은 감세 철폐에 대해 “감세가 철폐되면 정책 일관성이 저하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외국인 투자자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해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간 거래에는 과세하고 특수관계가 아닌 기업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공생발전을 이뤄 내리는 정부의 의지가 다시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전체적으로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집중한 개정안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인들에게는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중앙회 측은 “특히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하고 고용중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한 점 등은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경영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새로운 개념의 **MY-MO** 심는가발 마이모

추석맞이 호자가발 세일 39만원

**특수가발 대여!!**

- 수영, 사우나, 스포츠, 취침시 완전해결
- 100% 인모사용 및 형상기억 모발
- 영화 기법을 이용한 Front NET souk 제품출시
- 타사 수선, 교정관리

“내 머리 같은 자연스러운” 내 나이를 찾으세요

KBS **웃찾사** **세상의 아침** OSBS **웃찾사** **MBC** **세상따라** 전국방영

NEW 신제품 0.02mm 마이크로 가발

경력 20년 노하우 062-224-2738 010-4809-2738

우리은행, 현대카드, 금호중앙금융, 마이모 (남산빌딩 409호)

상무지구 호텔 예술의전당 **GRAND OPEN** 1주년 기념

**웨딩 · 객실 대형홀인 행사**

새롭게 준비한 **총 100가지 뷔페**

**객실 50%할인 및 조식뷔페(20중) 무료제공**

- \* 대형예식장 뷔페식비 보다 저렴하거나 동일합니다.
- \*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참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 \* 하객 400인 이상 보증시 **원목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 \*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은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예약문의** 362-0011, 600-9999